

충남의 소득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백 운 성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wsbaek@cni.re.kr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에 대해 지역경제 차원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있음.

CONTENTS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소득 역외유출 실태와 원인
3. 충남경제의 구조적특성에 대한 검토
4. 소득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접근방향
5. 정책목표별 추진과제

요약

- 충남지역의 소득역외유출을 완화하고 지속발전가능한 충남 지역경제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 생산, 분배, 지출의 3가지 측면에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함.
- 첫째, 생산측면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내제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 확대, 대중소기업 협력인프라 구축, 지역기반 강소기업의 육성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임.
- 둘째, 분배측면에 있어서는 지역기업에 대한 정주여건 확충, 지역인재의 키움과 채용, 지역과 기업의 공동가치창출(CSV) 등 상생발전에 대한 모색을 통해 지역내 소득과 소비가 확대될 있도록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셋째, 분배 측면에 있어서는 그동안 분공장 형태의 지역경제에 대해 지속적 성장을 위한 지역재투자 유도, 지역화폐 및 지역특화 자원 사업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경제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0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7년 기준 충남은 지역내총생산(GRDP) 115.6조원으로 전국 3위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지역총소득은 84.7조원으로 생산과 소득과의 큰 괴리를 나타내고 있음
 - 결과적으로 지역내 생산된 부가가치중 30.8조원(26.7%)가 충남지역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모나 비중측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큰 상황임
- 지역정책적 측면에서 지역총생산대비 지역총소득의 괴리는 지역기업 영업잉여의 역외 귀속되고 지역내 소비와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단순히 영업잉여의 외부유출만이 아닌 생산중심의 분공장, 직주분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대기업-중소기업의 원하청 문제 등의 다양한 경제구조적 문제를 내제하고 있음
- 이러한 지역소득의 역외유출문제는 지역경제 구조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고, 지역경제발전에 있어 다양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간의 역외유출과 유입의 문제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역의 경제 및 산업정책수립에 있어서는 반드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충남지역 경제에서 소득 역외유출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도정의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데 있음
 - 충청남도의 경제 및 산업정책의 방향에 있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소득역외유출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의 도입과 추진에 있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전략을 제시코자 함

02 소득 역외유출 실태와 원인

1. 소득 역외유출 실태와 원인

- (지역경제의 높은 역외유출 규모) 2017년 기준 충남의 역외유출비중은 16개 광역시도중 가장 높음
 - 역외유출 비중 순위 충남 1위(26.7%), 충북(21.3%), 울산(20.1%) 등
 - 반면, 역외유입이 높은 지역은 대구(19.1%), 광주(13.9%), 대전(13.5%) 등

[시도별 역외유출 비중 (2017년 기준, 통계청)]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통계,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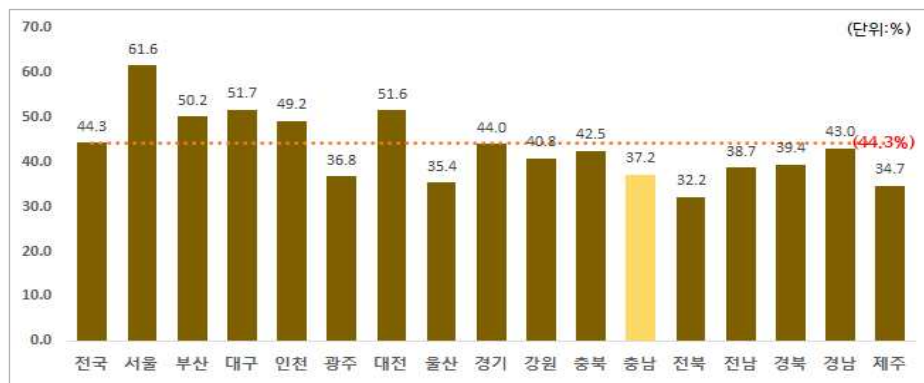
- (최근 역외유출 개선 추세) 2014년 이후 우리도의 역외 유출 비중은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그 규모와 비중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역외유출 비중 : 29.8%('14) → 26.4%('15) → 25.3%('16) → 26.7%('17)
 - ※ 우리도의 역외유출 비중이 높은 것은 타 지역대비 거대장치·장비산업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인구대 비 경제규모가 큰 것에서 기인하고 있음(인구 4.1%, 경제규모 6.8%)

2. 소득 역외유출 주요 원인

- (생산-소득의 괴리, 기업 영업잉여의 역외 귀속) 다수 기업의 분공장 형태 입지로 인해 영업잉여의 역외 귀속수준 높음

– 도내 제조업 본사 비중이 37.2%로 전국 평균 44.3%를 크게 하회하는 실정

[시도별 제조업본사 비중(단독 사업체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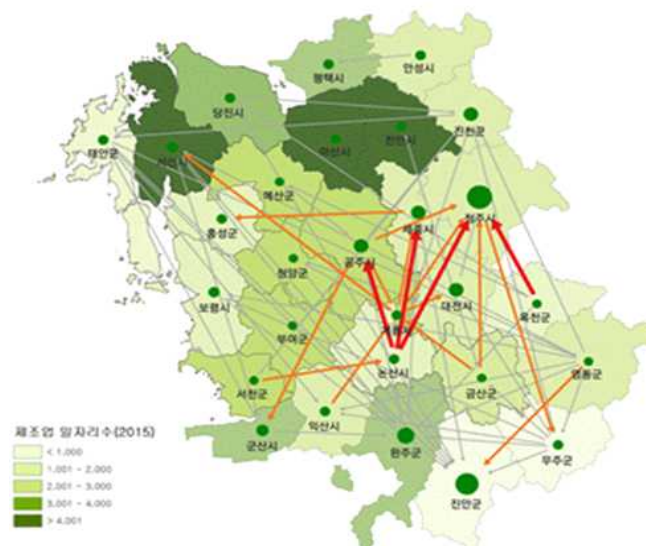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총조사, 2015

- (생산-소비의 괴리, 열악한 정주환경) 직주분리로 인한 피용자 보수(임금소득)의 높은 역외소비성향

– 정주여건이 양호한 세종, 청주, 대전, 군산과 인접해 있어 실거주지와 근로지간 불일치로 역내 소비 진작에 한계

[우리도와 주변지역간 직주실태 (통근통학권 및 제조업 분표)]



자료 : 충남연구원(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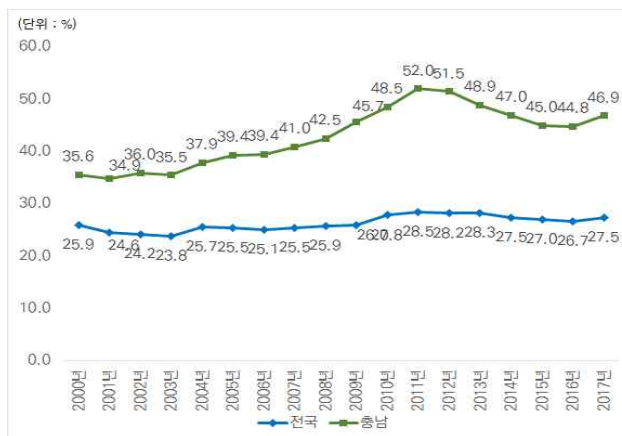
03

충남경제의 구조적특성에 대한 검토

1. 분공장 형태의 대기업 중심의 지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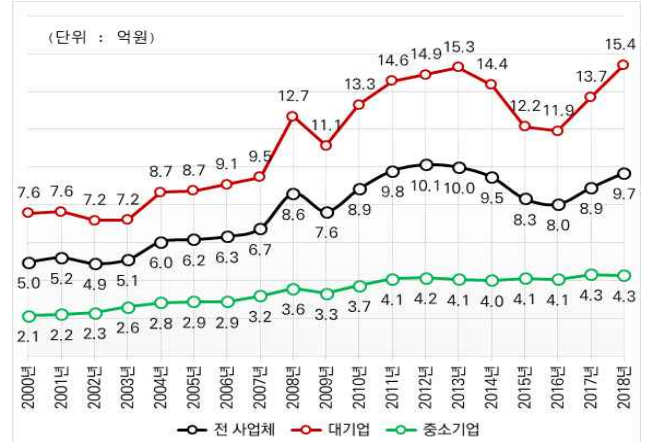
- (수출기반의 제조업중심 성장) 충남은 1990년대 이후 수출중심 대기업의 생산공장이 지역내 확대되면서 지역경제의 성장을 견인
 - 반면, 대기업의 성장과 달리 중소기업은 독립적 제품을 가진 기업보다는 대기업과 연계된 1, 2차 밴더 중심으로 집적
 - * 2000년 이후 연평균경제성장률(CAGR) 6.3%(전국 3.8%)로 전국 최고의 성장률 시현(충청남도 GRDP 115조원(전국 7.4%(1554조원), 경기,서울에 이어 3위, 2017년 기준))
- (대기업 의존형 경제구조) 수출 대기업중심의 지역경제구조로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중소기업의 수직계열화 등 지역경제 순환생태계의 한계
 - *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대부분 대대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연계구조로 수직 계열화 된 기업생태계를 구조

[충남의 제조업 비중 변화 추이]



자료 : 통계청, 지역계정, 각 년도

[충남의 대기업·중소기업 매출 추이]



자료 : kisvalue, 기업통계, 각 년도

2. 높은 대외 의존도와 낮은 부가가치율

- (높은 수출입 의존도) 충남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5.2%(920억불, 국내 6,047억불)를 수출하며 대외의존도가 광역시도중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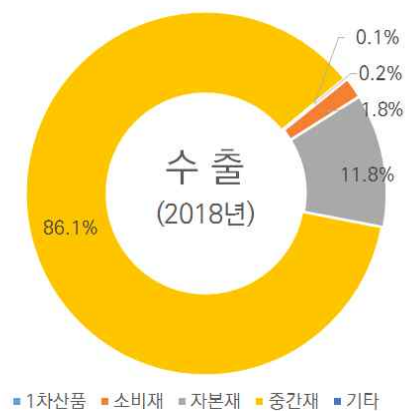
– 특히 중국과의 교역이 많은데, IT제품 및 부품소재 등을 포함한 저가 생산재 및 소비재에 대한 중국과의 경쟁격화되고 있음

* 특히 수출국가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3%로 가장 높음(홍콩을 포함한 중화권 52.0%)

- (원자재수입과 중간재 위주의 수출) 중간재와 기초소재 수입을 통해 가공된 중간재 수출의 가공무역형 구조로 낮은 부가가치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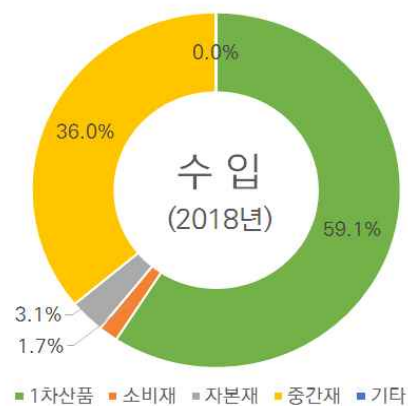
* 중간재 수출 58.9%(2010년) → 86.1%(2018년)

[가공단계별 수출 비중, 충남]



자료 : 지역별 수출입, 무역협회, 2018

[가공단계별 수입 비중, 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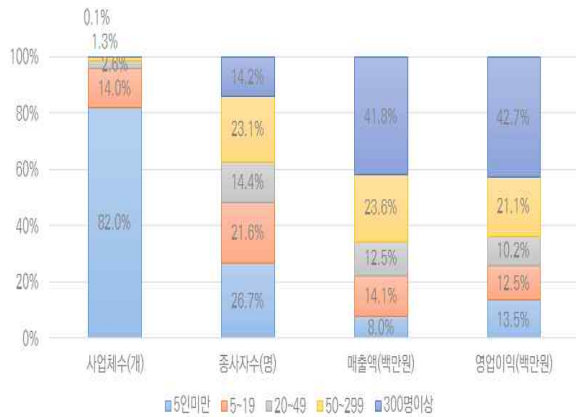
자료 : 지역별 수출입, 무역협회, 2018

3. 지역 산업 및 고용구조의 취약성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고용·임금 격차) 300인 이상 대기업이 지역 고용의 14.2%, 지역매출의 41.8%, 영업이익의 42.7%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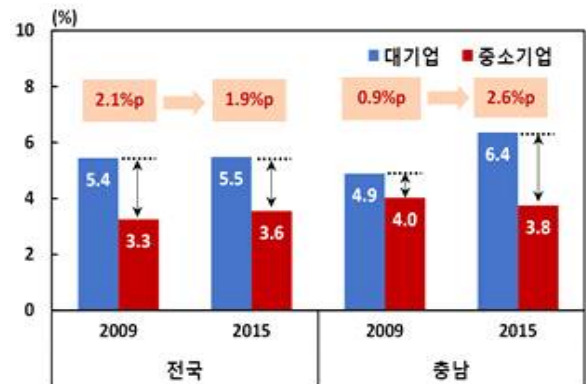
– 5인 미만의 소기업은 129,826개(82.0%)인데 반해 지역고용은 26.7% 점유

[충남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별 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총조사,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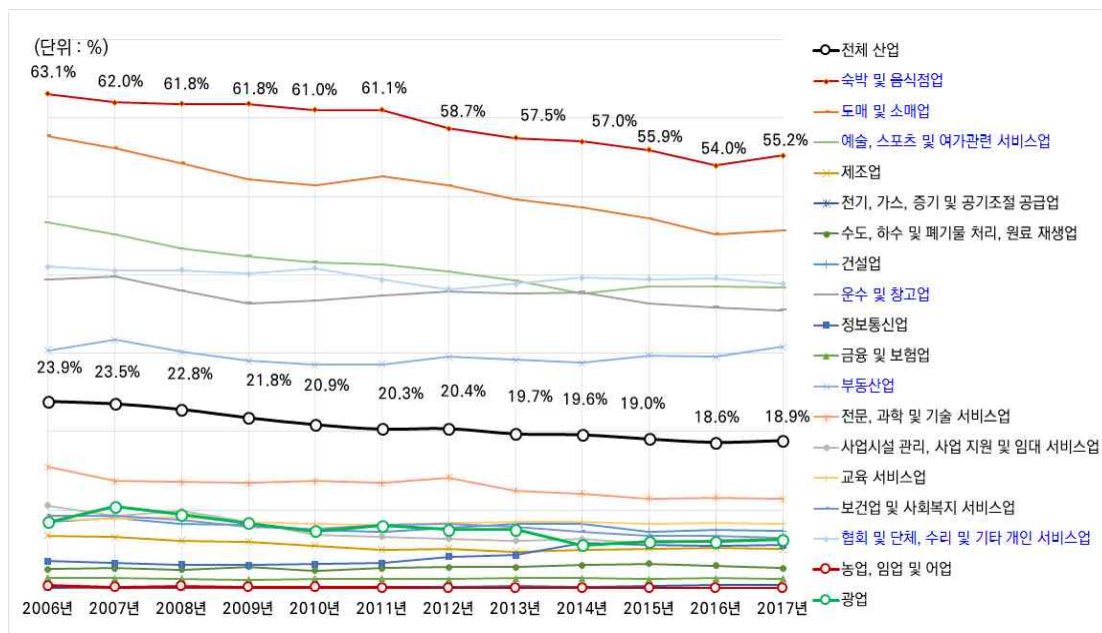
[충남의 기업규모별 영업이익률 변화]



자료: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2017) 재인용

- **(자영업자의 과다상태 지속)** 충남의 자영업자비중은 18.9%로 점차 낮아지는 수준이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 운수창고업 등 개인 서비스중심의 비중이 높은 상황
 - 영세 개인사업체의 경우 전근대적 경영으로 생산성 향상에 한계, 기업지원시책 등의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 제약적임
 - * 단독 경영 또는 가족구성원의 무급노동에 의존한 영세업체 (무급가족종사자 169,331명, 전체취업자의 18.9%, 농림어업 제외 165,195명, 2017년 기준)

[충남의 각 업종내 자영업자 비중 및 변화 추이]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7년 기준

04

소득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접근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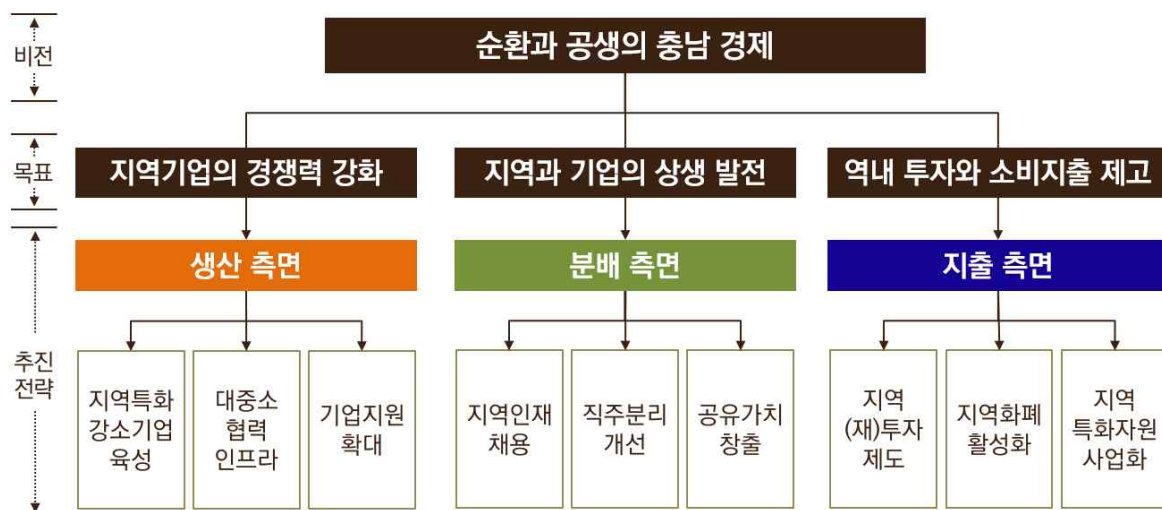
1. 기본방향 및 정책 목표 설정

- 순환과 공생의 충남경제 : 지속발전가능한 충남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경제 선순환체제 구축” 과 “주체간의 공생발전을 도모”

2. 정책목표

- ① 글로벌 대한민국 충남으로서의 기업투자과 지역내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 ② 지역기업 정주여건 확충, 지역인재의 키움과 채용, 지역과의 공동 가치창출을 통한 “지역과 기업의 상생발전” 추진
- ③ 충남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지역재투자, 지역의 착한 소비를 통한 “역내 투자와 소비지출 제고”

3. 주요 추진전략



4. 소득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총괄표)

정책 목표	추진전략	주요 사업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생산측면)	지역 특화 강소기업 육성	1-1-1. 월드브랜드 중소기업 육성 및 선정 지원 1-1-2. 벤처·창업기업 혁신 생태계 조성 1-1-3. 중소벤처 육성을 위한 엔젤펀드 확대
	대중소 협력 인프라	1-2-1. 성과공유제 추진 1-2-2.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지원 1-2-3. 기업 선순환 매칭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업지원 확대	1-3-1. 중소기업 통합지원서비스체계 구축 1-3-2.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1-3-3. 중소기업 지원자금 확대 및 소상공인 부담 경감
지역과 기업의 상생 발전 (분배측면)	지역인재 채용	2-1-1.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2-1-2. 청년 지역인재 순환시스템 구축 2-1-3. 지역기반 일자리 서비스 제공
	직주분리 개선	2-2-1. 내포혁신도시 지정 2-2-2. 직주불일치 완화를 위한 상생산업단지 확대 2-2-3. 직주분리 개선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공유가치 창출	2-3-1. 기업의 공유가치(CSV)창출 2-3-2. 지속발전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2-3-3. 사회적경제기반의 지역플래너 양성
역내 투자와 소비지출 제고 (지출측면)	지역(재)투자 제도	3-1-1. 지역기업 현지화 및 소비주권 운동 추진 3-1-2. 지역내 투자 및 기업입지 환경 조성
	지역화폐 활성화	3-2-1. 지역화폐 모바일화 및 통합플랫폼 구축 3-2-2. 지역화폐 활성화 및 규모 확대
	지역 특화자원 사업화	3-3-1. 농어촌 자원 융복합화를 통한 소득창출 기반 조성 3-3-2. 유희시설 및 폐공간 활용 다각화 3-3-3. 체류형 관광상품개발 및 투어패스권 도입

1.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1.1 지역특화 강소기업 육성

① 월드브랜드 중소기업 육성 및 선정 지원

-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성장 발판 마련) 도내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 충남형 챔피언 기업(4개사), 월드클래스 플러스 기업(3개사)육성
 - * 유망 중소기업(연 10개사 선정) → 충남형 챔피언 기업(신설) → 글로벌 강소기업(연 12개사 선정) → 월드클래스 플러스 기업(신설) 단계별 육성
- (중앙정부 글로벌기업 선정 지원)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등의 글로벌 중소기업 예비기업 후보군으로 육성토록 사전 지원
 - 미래 한국 제조업을 선도할 '글로벌CHAMP 300' 선정 지원(산업부) ; ' 20~' 27까지 300개 기업 선정 R&D(최대4년, 60억원), 해외마케팅 집중지원

② 벤처·창업기업 혁신 생태계 조성

- (지역기반 창업 및 벤처 육성) 벤처·창업기업의 성장 동력 발판 마련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
 -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공간조성 및 기업생태계 연계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동력 마련
 - * 스타트업 파크「C-Station」조성 추진(창업기업 보육실, 코워킹스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 캠퍼스 및 유관기관 입주ZONE, 공동회의실 등의 개발형 창업 인프라)
 - * 충남청년창업프라자 조성(11월 개소), 창업보육센터 지원(14개, 7억원)

③ 중소벤처 육성을 위한 엔젤펀드 조성 확대

- (중소벤처의 성장 발판 마련) 지역 경제내 중소벤처의 혁신 창업과 지역내 정착을 위한 정책자금의 확대
 -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독립적 자금 확보를 위한 중소벤처 육성 투자조합 결성·운용(6개 펀드 1,875억원)
 - * 충청권경제(295억), 충남엔젤(50억), 충남한화(150억), TS우리충남(780억), CKD-BS스타트업(300억) 조성 및 중소벤처 육성 신규투자조합 300억원 결성(10월)

1.2. 대중소기업 협력인프라 구축

① 성과공유제 추진

- (지역 공기업 성과공유제 시범사업 실시) 성과공유제 참여기업 대상 지역기업지원사업 평가시 인센티브 부여
 - 협력이익공유제(판매 이익 공유), 성과공유제(원가절감 이익 공유) 등 중앙정부 추진사업에 대한 지역인센티브 및 가점 부여
 - * 제4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2018~2020)
- (하청기업의 적정이윤 보장) 주요 업종 납품단가 적정이윤 보장을 위한 단가 협의 표준절차 개발
 - 표준절차 채택 여부를 반영하고 인센티브 확대

②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지원

- (공동기술개발 자금 매칭)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해 대기업 지원이 있는 경우 중기부 R&D 자금 매칭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과 연계하여 R&D지원 자금 매칭 지원
-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대·중소기업간 스마트공장 구축 및 전문기술지도 등의 협력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시설 및 운영자금, 경영안정 자금 등의 지원자금 이차보전 확대 추진
 - * 대기업 전문인력 지도를 통한 현장개선, 공정혁신(PI) 사업을 확산하고, 대기업-정부 자금 매칭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중기부)

③ 기업 선순환 매칭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제조부문 생산과 소비의 연계시스템 구축) 중간재와 최종재의 구매 및 출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단위 on-line 시스템 구축(생산자와 구매자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완화)
 - 지역기업포털 이용 기업에 대한 할인판매(지역화폐 연계 활용)
- (부품 및 소재 특화단지 조성) 대-중소기업간의 역내 거래 활성화를 위한 하청 및 부품업체 중심의 특화산업단지 조성 추진

1.3. 기업지원 확대

① 중소기업 통합지원서비스체계 구축

- (One-stop 지원플랫폼 구축) 단일창구(single window) 및 중개(brokering)서비스 제공을 통한 기업지원정책 일원화
 - 충남경제진흥원 내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전문컨설턴트 배치, 조사 및 DB구축관리 인력 충원)
- (중소기업 통합적 지원 거버넌스 구축) 대학, 연구소, 유관기관간 지원정보 공유 협약체결
 - 중소기업 지원주체(유관기관, 지자체 등) 및 지원사업의 통합정보제공

②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애로 해소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 추진
 - 경제진흥원 Biz-콜센터 운영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지원 및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기업편익 제공
 - * 경영, 재무, 마케팅, 특허 등 분야별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6개사) 및 상담 등
 - * 공장 진출입로 확·포장 및 노후시설 개선 등(9건, 312백만원)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 * 도·시군 중소기업제품 구매(2조 3,437억원 목표, 10월말 2조 4,534억원)
 - * 전시박람회·판매전(81개사), 홈쇼핑(5개사)&소셜커머스 입점(63개사)

③ 중소기업 지원자금 확대 및 소상공인 부담 경감

-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지역내 투자 촉진
 - 총 지원규모 5,200억원 대비 4,647억원(4,816업체) 용자 지원(10월말)을 통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지원으로 경영안정 기여
 - * 2019년 자동차부품산업 경영위기 긴급 유동성 자금 81억원(114업체) 지원
- **(소상공인 접근성 강화 및 부담 완화)**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한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1.0% → 0.8%)

2. 지역과 기업의 상생발전 기반 마련

2.1. 지역인재 채용

①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 **(충남형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지역대학(연고) 출신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의 전 기관 시행
 - 신규채용자의 일정비율을 지역대학 출신자로 채용하는 ‘지역대학(지역연고) 출신 채용할당제’를 공공기관부터 시범 추진
 - *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특성에 맞게 채용할당제, 목표연도 설정을 통해 지역대학(지역인재) 일정비율 이상 채용(채용목표는 도지사와 공공기관간 협약 체결)
 - 도·시군 공무원 지역인재 채용 제도 검토

② 청년 지역인재 순환시스템 구축

- **(취업연계 계약학과 모델 확대)** 대학에서의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과 청년일자리 창출 교육모델 마련
 - 취업연계 특성화학과 도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전공중심 직무경험프로그램(현장실습+채용전제)운영, 장학금 지원

- 일·학습병행 특성화고 숙련 기술인재(도제) 육성 확대
- **(계약학과 모델 도입기업 인센티브 확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우대 및 중앙정부 R&D/비R&D사업 참여 확대

③ 지역기반 일자리 서비스 제공

- **(일자리 진흥원 설립)** 일자리 추진체계의 전문성 강화 및 일원화를 통한 지역내 고용분야 총괄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지역기반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추진)** 지역 및 산업여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창출 및 인력양성, 고용서비스 제공
 - * 2019년 일자리 대상 '우수상(인센티브 1억원)' 수상, 고용률 상위 유지
 - 지역혁신 프로젝트(2개), 산업인력 교육훈련(3,026명/11월 기준)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740명), 일자리 종합센터 운영(본소 1, 분소 1)

2.2. 직주분리 개선

① 내포혁신도시 지정

- **(내포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환황해 거점 중심도시 육성
 - 지역내 공공기관 이전으로 기업·대학·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수준 높은 주거환경 조성
 - * 전국 338개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전체의 44.1%(149개소) 위치(2018년말 기준)

② 직주불일치 완화를 위한 상생산업단지 확대

- **(직주불일치 해소를 위한 상생산업단지 확대)** 산업단지 입주업체 노동자와 인근 지역민의 삶의 질을 강화
 - '상생산업단지'는 산업단지의 개념에서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환경을 두루 갖춘 복합형 도시기반 시설
 - * 충남지역 산업단지 근로자의 31.9%는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살고 있고, 비동거 가족의 35.8%는 서울·경기권에 거주하고 있음(국토연구원, 2018)

– 충청남도는 2014년부터 ‘상생산업단지’ 사업에 566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기숙사, 편의시설 등 산업단지 정주기능을 강화(매년순도비 60억 투입)

* 충청남도는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부터 상생산업단지 지원사업을 추진

③ 직주분리 개선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 (정주기반 시설 확충) 쇼핑·유통 및 보건·의료 등 서비스업의 질적 제고

– 역외유출 규모 및 비중이 큰 쇼핑·유통, 보건·의료 등 서비스업 발전을 통해 가계소득의 역내 소비를 도모하고 소득과 소비의 선순환 관계를 구축 필요

* 아산신도시 13조 신규투자예 따른 인구유입 약 8만명 예상으로 우리 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마련을 위해 인근지역에 4개 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 (다양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 평생교육, 산·학 연계 교육 지원 등 교육 개선책 마련 및 가족단위 문화 기회의 확대, 다양한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 거주민들에게 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 사업 확대

2.3. 공유가치 창출

① 기업의 공유가치(CSV) 창출

● (사회환원→공유가치창출로 전환) 기업의 지역사회환원보다는 사회공헌활동으로서의 기업과 지역의 공유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

– 기업이 입지한 지역에서 인재육성, 관련산업의 창출,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기업과 지역의 미래성장을 위한 장기투자로서의 전환

● (기업-지역 특화공동체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기업의 핵심이미지 및 주요 사업분야와 연계한 지역사회발전 사업에 대한 발굴 추진

– 지역과 기업의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과 기업이미지 창출

* ‘기업-지역 특화공동체 프로젝트’ : 기업 및 지역특성화 연계 사업 발굴(포스코, 철강재를 활용하여 주택, 놀이터 등 마을 건축물을 짓는 ‘스틸빌리지’ 사업 시행), 디스플레이 특화거리, 미세먼지 저감숲 등

② 지속발전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 구축

- (사회적경제 전담기구 및 기금 설치) 지역주도의 사회적 경제육성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전담기구와 기금 설치 추진

* (전담기구) 민간위탁(3년, 9억원, 3팀 10명) 및 센터 개소('20.1월)

* (기금) 20억원 조성, 200억원 운용, 3년('20~'22), 융자 및 이차보전 등

- (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 발굴·확산)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육성 지원

* 일자리창출(31개/35억원), 시설장비지원(10개시군/3억원), 마을기업육성(3개/1.3억원)

*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R&D 197백만원, 비R&D 172백만원)

③ 사회적경제기반의 지역플래너 양성

- (사회적경제 창업지원교육센터 확대) 지역 스스로의 문제해결형 현장전문가 양성 및 사회적경제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교육지원 확대

– 공유경제 및 ICT기반의 사회적경제 창업지원교육센터 확대 추진

* 사회적경제 창업지원교육센터(2개소) 운영(청운대, 50명/ 충남도립대, 127명)

– 청년활동가(35명) 및 청년도제(61명) 육성, 초중고 인성·진로교육(1,173명)

3. 역내 투자와 소비지출 제고

3.1. 지역(재)투자 제도 도입

① 지역기업 현지화 및 소비주권 운동 추진

- (유통자본 및 분공장 지역현지화 추진) 지역내 신설 기업에 대한 지역현지법인화 및 지역연계화 추진

– 지역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유통분야에 있어 시범적 추진

* 주요내용 : 예금과 직원급여를 지역으로 예치, 지역민 95%고용, 영업이익 5% 지역 환원, 지역생산제품 30%매입, 용역서비스와 인쇄물 지역발주, 지역상품의 중앙판로 제공, 지역 업체의 우선특례 입점, 물가안정추진 실적 등

- 기타 기업 본사이전 및 지역현지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소비자 주권 및 권익증진 확대) 유통, 금융 자본 등의 지역입지시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한 지역현지화 및 협력 추진

-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 소비주체와 연계한 지역 소비주권운동 추진을 통한 지역현지화 유도

㉑ 지역내 투자 및 기업입지 환경 조성

- (기업입지 환경 조성) 입지수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공급과 지역 정착을 위한 정주 등의 복합공간 확충

- 2019년 산업단지 4개 지구 지정 추진(3,325천㎡(천안1, 공주2, 아산1))

- 상생산업단지 추진 : 9개 시군 24개 사업 7,994백만원(도비50%)

- (국내기업 및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 글로벌 우량기업 유치로 지역내 일자리 창출 등 성장동력 확보

- 대규모 외국인투자유치 위한 입지·현금지원 강화(국세감면 폐지로 인한 대체 인센티브 지원) 및 증액투자 유도를 위한 도내 사후관리 강화

* 미국·일본·유럽 등 14개사·913백만불 투자유치, 2,790명 고용효과

* 지역 균형발전 고려, 천안 등 서북부 지역 외에 남부권 유치 추진(홍성, 보령 등)

- 내포산단, 석문국가산단, 장항 국가산단 등의 주요 산업단지 투자 유도

*총 618개사(수도권 16개사), 3조 5,432억원 투자, 12,523명 고용창출(10월말 기준)

3.2. 지역화폐 활성화

㉒ 지역화폐에 대한 모바일화(전자화폐) 및 통합 플랫폼 구축

- (지역 화폐 모바일화) 각 시군별 추진되는 지역화폐에 대한 모바일화(전자화폐) 도입(종이화폐 병행)

- 지역화폐의 현금성, 사용편의 등을 고려한 모바일화 추진

- (지역 화폐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시군의 지역화폐 모바일화, 사용업종, 위조방지 등에 지역화폐 규모화에 따른 종합관리 플랫폼 구축

② 지역화폐 활성화 및 규모 확대

- (지역소비지출 유인과 소상공인 보호) 소득 역외유출 방지, 소상공인 보호(수수료 0%), 내수촉진 등 지역경제 선순환 유도
 - 할인판매와 발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모바일 지역화폐 도입을 전 시군으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충남형 지역화폐 도입 운영 및 활성화) 도내 15개 시군에 대한 지역화폐 도입과 활성화 유도
 - 2019년 (300억) → 2020년 (500억) → 2021(1000억)

3.3. 지역 특화 자원 사업화

① 농어촌 자원 활용 융복합화를 통한 지역기반 소득 창출

- (농어촌 융복합사업의 내실화) 중앙정부 및 충남도차원의 농촌자원활용 사업의 확대·내실화를 통해 지역 소득 창출
 - 각 사업주체와의 연계성 강화 및 통합적 사업추진을 위한 조정기능 강화
 - * 포괄보조사업 : 농촌자원복합산업화, 향토산업육성,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농촌관광마을 활성화,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 등
- (도시 농촌간의 공유농업) 농촌자원을 도시소비자·학교급식 등과 연결·공유하는 플랫폼 관리 강화

② 유희시설 및 폐공간 활용 다각화

- (지역시설 창조 탐색) 지역내 유희시설 및 폐공간에 대한 새로운 활용방안 마련을 통해 활성화
 - 복합문화공간, 예술창작소, 창고창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유희공간 활용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활성화 추진
-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 유희시설에 대한 공유부역, 마을평상 등 지역사회 및 주민기반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간 조성

③ 체류형 관광상품개발 및 투어패스권 도입

-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교통 및 지역개발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요창출형 관광상품의 개발과 확산 필요

－ 보령~안면도간 연육교 사업,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등 충남의 관광여건 개선 전망

※ 거가대교 개통 뒤 거제관광객 전년도 대비 485% 증가

- (충남투어패스권 도입 검토) 충남지역의 관광지, 식당 등에서 이용 가능한 충남투어패스권을 판매하여 지역 선순환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연계

* 전북에서는 전북투어패스권 판매(고속터미널 관광안내소, 전북문화관광재단, 전주역 관광안내소, 내장산관광안내소 등)중으로 일부 시설의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주요 관광지를 최대 반값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참 고 자 료

국토연구원(2018) 국토정책 Brief 제 651호

충청남도(2018), 우리지역 소득 역외유출 관련 학습토론회 회의 자료, 2018.9.27

충청남도(2019), 충남 양극화 대응 정책토론회 자료, 2019.10.16.

충청남도(2019), 충남 경제사회 구조변화와 양극화 대응방안, 중간보고회 자료, 2019.11.28

충남발전연구원(2012), 충청남도 지역경제 선순환 방안 연구.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2017), 충남지역 가계의 소득분배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